



# 새수영

구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람	기관의 장

## 수영구보

호외 제574호 2020. 9. 29.(화)

### 조례 · 규칙 · 공고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5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10
○부산광역시 수영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13
○부산광역시 수영구 미세먼지 저감 및 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	25
○부산광역시 수영구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30
○부산광역시 수영구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	39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예방에 관한 조례-----	43
○부산광역시 수영구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48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60
○부산광역시 수영구 소송사무 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	65
○부산광역시 수영구 재무회계 규칙 전부개정규칙-----	70
○부산광역시 수영구 금고 지정 신청 재공고-----	82

회 람								
--------	--	--	--	--	--	--	--	--

· 발행 : 수 영 구

· 편집 : 기획감사실 (610-4075)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0년 9월 29일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     강 성 태

---

## 부산광역시 수영구 조례 제1000호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시행령 제35조제2항”을 “시행령 제35조”로 한다.

제2조제1항제1호 중 “공무여행”을 “공무 출장”으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국가에서 정하는 “공무상재해인정기준”에 준한다”를  
“「공무원 재해보상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공무상 재해 인정 기준  
에 준용한다”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45조 “별표 2”의 장애등급에  
포함될 경우에만 해당된다.”를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40조  
“별표 3”의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일시불로”를 “한꺼번에”로, “구좌”를 “계좌”로 한다.

제9조제3항 중 “구성”을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의장의 추천을 받은 의회”를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으로 하며 같은 항 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1명

제9조제7항 전단 중 “의거”를 “따라”로 하며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보상금 청구에 대한 경위조사 등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경우 15일 범위에서 심의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제9조제9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심의회에 출석한 위원 중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부산광역시 수영구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안이유**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보상금 청구에 대한 경위조사 시  
단서조문을 신설하여 조례의 실효성 제고함

**◆ 주요내용**

- 가. 장애등급 기준 법령 정비(제3조 및 제5조)
- 나. 보상심의회 구성 시 상위법 반영(제9조제3항)
- 다. 보상금 청구에 대한 경위조사 시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경우 심의기간  
연장 단서조문 신설(제9조제7항)
- 라. 법령개정사항 반영 및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문구 수정  
(제1조, 제2조, 제9조제9항)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0년 9월 29일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     강 성 태

---

## 부산광역시 수영구 조례 제1001호

##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⑤ 제4항에 따른 이용의 제한 또는 정지 등의 처분 결과는 주민이 잘 볼 수 있게 게시하여야 한다.

제6조제1항의 제4호를 제5호로 하고 제5호(종전의 제4호) 중 “행사”를 “체육행사”로 한다.

같은 항에 제4호,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장애인, 장애인단체, 장애인체육동호회의 체육활동
6. 경기연습, 개인연습, 체력단련 등의 체육활동
7. 체육활동 이외의 문화행사, 공연, 전시행사 등

제15조제3항 중 “임명 또는 위촉한다.”를 “특정 성별에 치우치지 않도록 임명 또는 위촉한다” 로 한다.

제18조의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지된 자는 1년간 위탁운영에 참여할 수 없다.

별표 2는 별지와 같이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별표 2]

이용료 감면 기준(제10조 관련)

감면 비율	감면 사유별	비고
이용료 전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1회 또는 월이용료 기준
100분의 50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그와 동행하는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귀환포로 및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부산광역시 수영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및 그 가족	
100분의 30	만 65세 이상의 사람(최초 수강일자 기준)	
	「부산광역시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지원 조례」의 적용을 받는 다자녀가정에 속하는 사람으로서 가족사랑카드를 소지한 사람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100분의 15	12개월 이상 이용료를 한 번에 납부한 경우	
100분의 10	2종목 이상 회원 등록 시(각 종목별 감경)	
	수영장을 이용하는 만 12세 이상 만 54세 이하의 월 회원인 여성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이용료를 한 번에 납부한 경우	
100분의 5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이용료를 한 번에 납부한 경우	
100분의 20 이하	기타 상기 사유 외 수영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안이유**

행정안전부 및 국가보훈처의 자치법규 정비 과제 사항 및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운영에 관련된 조항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사항 반영  
(제5조제5항, 제6조제1항제4호 ~ 제7호, 제18조제3항)
- 나. 법령에 따른 요금감면대상자 정비(별표 2)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0년 9월 29일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      강 성 태

---

## 부산광역시 수영구 조례 제1002호

##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사무국) ① 대표협의체에는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에는 팀장 또는 직원을 둘 수 있다.

③ 사무국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법 제41조제2항 각 호에 관한 사항
2. 행정 실무 및 예산회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각 협의체 위원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④ 사무국과 관련된 세부적인 내용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안이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무국 설치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 주요내용

대표협의체에 사무국 설치를 위한 근거 규정을 신설(제2조의2)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수영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0년 9월 29일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     강 성 태

---

## 부산광역시 수영구 조례 제1003호

## 부산광역시 수영구 아동친화도시 구성에 관한 조례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의 권리가 존중되고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부산광역시 수영구를 아동친화도시로 조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항에 따른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아동친화도시”란 아동이 행복하고 존중받는 도시로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의 기본정신을 실천하는 도시를 말한다.
3. “아동의 권리”란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그리고 자유로써 아동이 누리는 다음 각 목의 권리를 말한다.

- 가. 생존권 : 생명을 유지하기 위하여 영양가 있는 음식 및 깨끗한 공기와 물을 섭취할 권리, 안락한 주거지에서 적절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 최상의 건강을 지키기 위하여 의료혜택을 받을 권리
- 나. 보호권 : 각종 위험, 차별대우와 착취, 학대와 방임, 가족과의 인위적인 분리 등으로 부터 보호받을 권리

다. 발달권 : 신체적·정서적·도덕적·사회적 성장에 필요한 정규 교육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교육을 받고, 놀이·여가·정보 문화 활동 등을 누릴 권리

라. 참여권 :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자유와 자기 생활에 영향을 주는 일에 참여하고 말할 수 있는 권리

4. “아동권리 옴부즈퍼슨”은 아동의 권리를 보호·증진하거나 구제기능을 독립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위촉된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조직과 추진체계를 구축하여 아동친화도시 구현에 필요한 시책 및 사업이 적극 발굴·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2장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원칙 및 정책

제4조(아동친화도시 조성 원칙) 구청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아동이 인종, 종교, 성별, 나이, 학력, 신체조건, 장애 등에 따른 어떠한 차별도 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정책을 결정할 때는 아동의 권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3. 아동이 교육, 의료, 여가, 문화생활, 노동, 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보호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4. 아동의 의견을 존중하여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5. 아동은 독립된 인격체로서 존중되어야 하며, 그 잠재능력과 창의력이 능동적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아동친화도시 조성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주요시책
3.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추진위원회에서 제안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아동을 포함한 부산광역시 수영구 구민의 의견을 정기적으로 수렴하고, 그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법인·단체 및 개인 등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아동의 참여보장) 구청장은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정책과 활동에 대해 아동이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아동의 의견이 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아동영향평가) 구청장은 자치법규, 정책 등이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하여 아동친화도시 구성에 활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아동의 건강증진) 구청장은 아동이 신체적·정신적·사회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아동안전을 위한 조치) 구청장은 아동이 각종 폭력과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도시 환경 조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1. 아동 유해환경 차단 및 범죄예방 안전망 구축
2. 아동의 안전한 생활환경 및 교육환경 구축
3. 아동 관련 시설의 안전 조치
4. 아동을 대상으로 한 안전교육 실시

제10조(아동친화적 공공시설 조성) 구청장은 아동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도로·공원·녹지 공간 등 각종 공공시설 조성사업 추진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아동의 보행 편의
2. 공공시설 이용에 필요한 아동의 안전 확보
3. 가정처럼 아늑하고 편안한 아동 이용 공간 확대
4. 자연친화적인 환경 조성
5. 각종 공공시설의 복합적 활용 및 공공시설간의 유기적 연계

제11조(아동의 교육·여가·문화생활) 구청장은 아동이 능력을 발휘하고 충분히 쉬고 놀 수 있도록 교육·여가·문화생활 등 다양한 분야의 참여기회를 제공하고 관련 시설 확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아동권리 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아동의 권리실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관련 자료를 수집하여 아동을 위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실태조사 분석결과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아동권리 홍보 및 교육) ① 구청장은 모든 구민이 아동권리를 이해하고 존중하도록 아동권리를 홍보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아동 관련 시설의 장 및 종사자, 아동의 보호자, 공무원, 그 밖에 아동을 일상적으로 만나는 사람에게 아동권리에 관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아동참여기구) ① 구청장은 아동의 직접 참여를 보장하고 그 의견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부산광역시 수영구 아동참여기구(이하 “아동참여기구”라 한다)를 둔다.

1. 아동 정책 및 예산에 대한 의견 수렴, 토론 및 의견 제출
2. 아동 정책 및 사업에 대한 참여활동

② 아동참여기구는 주요 활동 내용에 따라 명칭을 달리 사용할 수 있다.

③ 아동참여기구는 아동으로 구성한다.

④ 구청장은 아동참여기구에서 제안된 의견을 구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아동참여기구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15조(사업수행에 따른 재정지원) 구청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로 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3장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

제16조(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과 관련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수영구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아동친화도시 조성관련 정책의 기본방향과 전략과제 추진에 관한 사항
2. 아동친화도시와 관련된 교육·홍보 등에 관한 사항
3. 아동친화도시와 관련된 민·관 협력에 관한 사항
4. 제7조에 따른 아동영향평가와 관련된 계획 수립, 대상사업 선정·평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아동친화

도시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④ 아동친화도시업무 담당국장·과장, 보건소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위촉한다.

1.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 부산광역시 수영구 관할 경찰서 아동·청소년 관련 담당 부서장
3. 부산광역시 해운대교육지원청에 소속된 공무원으로서 아동·청소년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하였던 사람
4. 아동관련 기관·단체 대표
5. 아동 보호자 대표
6. 아동참여기구 대표
7. 그 밖에 아동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18조(위원의 임기) 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회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0조(회의) ① 정기회의는 연 1회로 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 ②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할 경우에는 각 위원에게 회의일시, 장소, 토의안건 등을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④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비치하여야 한다.
- ⑤ 구청장은 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아동친화도시 조성 정책을 수립하는데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1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 1. 위원의 건강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 2.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 3.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해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2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부산광역시 수영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4장 아동권리 옴부즈퍼슨

제23조(아동권리 옴부즈퍼슨의 운영 및 구성) ① 구청장은 아동의 권리를 보호·증진하고,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기능을 수행하는 아동권리 옴부즈퍼슨을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아동권리 옴부즈퍼슨은 5명 이내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아동인권 법률문제에 관한 전문가
2. 아동인권 관련 분야에서 대변인 역할의 경험이 있는 사람
3. 아동 관련 분야에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24조(아동권리 옴부즈퍼슨의 임기) 아동권리 옴부즈퍼슨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25조(아동권리 옴부즈퍼슨의 기능) 아동권리 옴부즈퍼슨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독립적인 지위를 갖고 아동의 입장을 옹호해 줄 수 있는 대변인으로서 활동
2. 아동권리에 입각한 관련 정책, 제도, 법령, 서비스 개선 도모
3. 아동권리 침해사례 발굴, 모니터링 및 개선안 제언
4. 그 밖에 행정 전반에서 아동권리와 관련된 사항

제26조(아동권리 옴부즈퍼슨의 해촉) 구청장은 아동권리 옴부즈퍼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아동권리 옴부즈퍼슨을 해촉할 수 있다.

1. 아동권리 옴부즈퍼슨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품위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그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27조(수당 등)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아동권리 옴부즈퍼슨의 활동에 필요한 수당을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안이유**

아동의 권리가 존중되고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부산광역시 수영구를 아동친화도시로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정의(제1조 ~ 제2조)

나.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원칙 및 정책 (제4조 ~ 제15조)

다.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에 관한 사항 (제16조 ~ 제22조)

라. 아동권리 옴부즈퍼슨에 관한 사항 (제23조 ~ 제27조)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수영구 미세먼지 저감 및 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0년 9월 29일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     강 성 태

---

## 부산광역시수영구 조례 제1004호

## 부산광역시 수영구 미세먼지 저감 및 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미세먼지 저감 및 피해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미세먼지”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먼지로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가. 미세먼지(PM-10) : 입자의 지름이 10마이크로미터( $\mu\text{m}$ ) 이하인 먼지  
나. 초미세먼지(PM-2.5) : 입자의 지름이 2.5마이크로미터( $\mu\text{m}$ ) 이하인 먼지

2. “미세먼지 취약계층”이란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피해의 우려가 큰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어린이·영유아·노인·임산부·호흡기질환자·심장질환자 등 미세먼지 노출에 민감한 계층

나. 옥외 작업자, 교통시설 관리자 등 미세먼지 노출 가능성이 높은 계층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미세먼지의 배출 저감 및 관리를 위한 시책을 시행하고, 미세먼지로부터 부산광역시 수영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자의 책무) 부산광역시 수영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사업 활동을 하는 자는 그 사업활동으로 발생하는 미세먼지의 배출 저감

및 관리를 위해 사업장 환경개선, 연료사용량 감축, 친환경 에너지 사용 등 필요한 조치 이행에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구에서 시행하는 미세먼지 저감 및 피해 예방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구민의 책무) 구민은 일상생활에서 대중교통 이용, 에너지고효율 제품사용, 생활주변 식물 식재 등의 방법으로 미세먼지 배출을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구에서 추진하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시책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저감계획수립 등) ① 구청장은 미세먼지로부터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부산광역시 수영구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계획(이하 “저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저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미세먼지 농도 등 관련 정보
2.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시책추진
3. 미세먼지 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사항
4. 미세먼지 관련 교육 및 홍보

5. 그 밖에 구청장이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미세먼지 저감 등을 위한 지원) 구청장은 미세먼지의 배출을 줄이고 구민의 건강 보호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미세먼지 취약계층 및 미세먼지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어린이집, 유치원, 경로당 등)에 대한 미세먼지 저감 및 피해 예방을 위한 사업
2. 그 밖에 구청장이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정보제공) ① 구청장은 구민이 미세먼지 농도 또는 대기오염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구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관할 지역에 「부산광역시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에 따라 대기오염경보가 발령된 경우에는 구민이 적절한 행동을 취할 수 있도록 전광판, 구 홈페이지 등을 활용하여 신속하게 전파하여야 한다.

제9조(교육 및 홍보) 구청장은 구민이 미세먼지 문제를 인식하고 미세먼지 저감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련 정보를 제공하며,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0조(관계부서의 협조) 미세먼지업무 담당부서의 장은 미세먼지 저감 및 피해 예방 시책을 추진할 경우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해당 시설 또는 미세먼지 취약계층 등을 관리하는 관계부서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관계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안이유**

미세먼지 배출을 저감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미세먼지가 구민 건강에 미치는 위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용어 정의 (제1조~제2조)

나. 구청장 등의 책무 (제3조~제5조)

다. 미세먼지 저감계획수립(제6조)

라. 미세먼지 저감 및 피해 예방 관련 사업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제7조)

마. 실시간 미세먼지 농도, 미세먼지 예·경보 등 정보제공에 관한 사항 (제8조)

바. 미세먼지 관련 교육 및 홍보, 관련부서의 협조 등에 관한 사항  
(제9조~제10조)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수영구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0년 9월 29일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     강 성 태

---

## 부산광역시 수영구 조례 제1005호

## 부산광역시 수영구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수영구 소속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민주성·투명성·전문성 및 효율성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원회”란 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에 관계없이 부산광역시 수영구(이하 “구”라 한다) 소관 사무의 심의·의결·자문 등을 위해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체를 말한다.
2. “당연직 위원”이란 법령, 조례 등에 따라 해당 직위가 위원으로 지정된 위원을 말한다.
3. “위촉직 위원”이란 당연직 위원 외에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 또는 임명하는 위원을 말한다.
4. “담당부서”란 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부서를 말한다.
5. “총괄부서”란 구 소관 위원회의 운영실태 등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① 구청장은 위원회를 공정하고 적정하게 운영함으로써 주요 정책에 관한 이해를 원활하게 조정하고, 관계 행정기관 간의 합의 및 협의를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며,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행정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법령 또는 조례에 규정된 기능과 권한을 넘어서 구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 등에 대한 자문을 하거나 조정·협의·심의·의결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구에 설치되는 모든 위원회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제5조(설치요건) ① 구청장이 위원회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업무 특성상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
2. 업무의 성질상 다양한 이해관계의 조정 등 신중한 절차를 거쳐 처리할 필요가 있을 경우

② 구청장은 구에 설치된 다른 위원회와 심의사항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사전협의) ① 담당부서의 장은 위원회를 신설할 경우 총괄부서의 장과 사전협의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위원회 구성근거, 다른 위원회와 성격 및 기능의 중복여부, 위원회 존속기한 등을 검토하여 협의한다.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당연직 및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미리 인원, 자격요건, 선정기준 등을 명확히 하여 구 홈페이지 및 구보에 공고하는 등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구청장이 위촉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추천 등의 방법을 통해 위촉할 수 있다.

1. 공개모집에 응모하는 사람이 없거나 응모자 중 자격기준에 합당한 사람이 없는 경우
2. 위원회 특성상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한정되어 공개 모집이 곤란한 경우
3. 특정한 안건을 처리하기 위해 설치되는 위원회가 해당 안건을 처리한 후 해산되는 경우
4. 그 밖에 공개모집이 불가능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③ 위원회에는 성별, 지역별, 직능별로 위원이 균형 있게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위원은 위촉과 동시에 별지 서식에 따른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의 중복참여 제한) 구청장은 동일인이 여러 위원회에 중복하여 위촉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
2. 특수전문분야 전문가로서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한정되어 있는 경우

### 3. 특정한 안건을 처리하고 해산되는 경우

제9조(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 임기는 3년 이내로 하되, 같은 위원회 내에서 총 6년을 초과하여 연임할 수 없다.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위원의 사퇴 또는 해촉 등의 사유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6. 그 밖에 구청장이 각 위원회의 심의 안건에 따라 제척되어야 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1.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위원이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3. 위원이 제10조 제1항의 제척사유에 해당함에도 스스로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4. 위원이 위원회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여 본인 또는 관계자(친족, 소속 법인 및 단체 등)가 이득을 취한 경우
5. 비밀누설, 직무태만, 품위손상, 비위사실, 부패행위 등으로 위원으로서 자질이 부족한 경우

제12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출석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안건이 경미하거나 천재지변 등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장은 회의개최 7일 전까지 위원들에게 회의일시, 장소, 안건을 통지하고, 회의 자료는 3일 전까지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게 위원회를 개최할 필요가 있거나 보안과 관련된 사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장은 회의의 명칭, 개최기관, 일시 및 장소, 참석자 및 배석자 명단, 진행순서, 상정안건, 발언요지, 결정사항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작성책임자는 담당부서의 장이 된다.

④ 위원회는 관계기관이나 부서에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이해관계인이 있는 경우 의견을 듣거나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안건의 심사 전에 질의·토론 내용, 회의록 등을 포함한 회의결과가 공개 될 수 있다는 사항을 위원들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제13조(회의결과의 공개) ① 위원회의 회의결과는 공개 할 수 있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의 비공개 대상정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구청장은 공개하는 위원회의 경우 회의록을 회의 종료 후 20일 이내에 구 홈페이지를 통해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참석자의 발언내용은 발언요지로 정리하여 공개하고 발언자의 실명은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제14조(존속기한) ① 구청장은 위원회를 설치할 때에 계속하여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없는 경우 해당 위원회의 존속기한을 조례 또는 규칙에 명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존속기한은 5년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한다.

제15조(위원회 관리 및 정비) 구청장은 위원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폐지하여야 한다.

1. 위원회의 기능이 상실되었거나 설치 근거가 소멸된 경우
2. 위원회의 기능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경우
3. 위원회의 운영 실적이 저조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6조(수당) 구청장은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 「부산광역시 수영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 운영 및 위원 임기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운영 중인 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

제3조(위원의 중복제한 및 위원 임기에 관한 적용례) ① 제8조는 이 조례 시행 후 위원을 신규 또는 재위촉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② 제9조제2항은 이 조례 시행 후 위원을 재위촉하는 경우에 적용하되, 임기의 기산일은 기존 위촉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 제안이유**

위원회의 설치요건 및 절차,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하고 위원의 청렴을 확보하여 위원회 운영의 민주성·투명성·전문성 및 효율성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 기본원칙(제1조 ~ 제3조)
- 나. 위원회 설치요건 및 구성 등(제5조 ~ 제7조)
- 다. 위원의 중복참여 제한 및 임기(제8조 ~ 제9조)
- 라.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위촉 해제(제10조 ~ 제11조)
- 마. 위원회 운영 및 회의결과의 공개(제12조 ~ 제13조)
- 바. 위원회의 존속기한(제14조)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수영구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0년 9월 29일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     강 성 태

---



## 부산광역시 수영구 조례 제1006호

## 부산광역시 수영구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무예의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전통무예를 체계적으로 보존·발전시키고 구민의 건강증진과 문화생활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통무예”란 「전통무예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무예를 말한다.
2. “전통무예단체”란 전통무예를 계승, 보급, 발전시키기 위하여 전통무예 진흥에 관한 활동이나 사업을 목적으로 등록된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제3조(책무) ① 부산광역시 수영구(이하 “구”라 한다)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수립한 “전통무예에 관한 종합적인 기본계획”에 따라 전통무예의 진흥을 위하여 각종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② 구는 수영구민의 자발적인 전통무예활동을 장려 및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 인력과 조직의 확보 및 예산의 지원 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진흥 및 지원 사업) ①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전통무예를 진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전통무예 전시체험관 건립
2. 전통무예 교육 및 지도자 양성
3. 전통무예 활용 생활체육 프로그램 활성화
4. 전통무예의 관광산업 및 문화콘텐츠산업화 기반 조성
5. 그 밖에 전통무예의 보존과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전통무예 진흥을 위하여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전통무예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5조(지원 대상) 제4조제2항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과 같다.

1. 구에 소재지를 둔 전통무예단체
2. 그 밖에 구청장이 전통무예를 통해 구의 전통문화 증진 또는 문화콘텐츠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전통무예단체

제6조(포상) 구청장은 전통무예의 진흥 및 발전에 이바지한 개인·법인·단체 등을 「부산광역시 수영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안이유**

전통무예의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전통무예를 체계적으로 보존·발전시키고 구민의 건강증진과 문화생활의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제1조 ~ 제2조)

나. 전통무예의 진흥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제3조)

다. 진흥 및 지원사업(제4조)

라. 지원대상(제5조)

마. 포상(제6조)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예방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0년 9월 29일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     강 성 태

---

## 부산광역시 수영구 조례 제1007호

##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예방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을 예방하여  
구민이 안전하게 공중화장실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중화장실 등”이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공중화장실과 개방화장실을 말한다.
2. “민간화장실”이란 민간시설 내에 설치된 화장실로서 공중 화장실  
등을 제외한 화장실을 말한다.
3. “불법촬영”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촬영을 말한다.
4. “불법촬영기기”란 불법촬영에 사용되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이  
공중화장실 등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불법촬영 예방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상시 점검체계 구축) 구청장은 구민의 안전한 공중화장실 등의  
이용을 위하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상시 점검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5조(불법촬영 등에 의한 성범죄 예방장치 등 설치) ① 구청장은 공중화장실 등에 안심벨과 안심스크린을 설치하여 불법촬영 등에 의한 성범죄를 예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공공건물 신축시 화장실 설치기준에 따라 출입문 하단부는 빈 공간을 두되 대변기 옆 칸막이 하단부는 불법촬영 등의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막아야 한다.

제6조(특별관리대상 지정) 구청장은 불법촬영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공중화장실 등을 특별관리 대상으로 지정하여 집중 점검하여야 한다.

제7조(민간화장실의 점검) ① 구청장은 민간시설의 소유자 또는 시설관리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민간화장실에 대하여 불법촬영기기의 설치 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민간시설의 소유자 또는 시설관리인이 민간화장실을 자체 점검하고자 하는 경우 점검 장비를 대여할 수 있다.

제8조(실태조사) 구청장은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계획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효과적인 불법 촬영 근절·예방을 위하여 경찰서 및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0조(신고체계의 마련) 구청장은 구민이 불법촬영기기의 설치가

의심되는 공중화장실 등을 발견한 경우 신고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11조(협조) 공중화장실 등의 관리자는 구민이 불법촬영으로부터 안전하게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구의 불법촬영기기 점검 정책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2조(홍보·교육) ① 구청장은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불법촬영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홍보물을 제작·배포하는 등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불법촬영 점검자에 대하여 점검방법 및 점검장비 사용 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불법촬영기기 점검에 관한 매뉴얼을 작성·배포할 수 있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안이유**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 등에 의한 성범죄 예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한 화장실 이용을 도모하여 국민의 편의와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 구청장의 책무(제1조~제3조)
- 나. 상시 점검체계 구축(제4조)
- 다. 불법촬영 등에 의한 성범죄 예방장치 등 설치(제5조)
- 라. 특별관리대상 지정(제6조)
- 마. 민간화장실의 점검 및 실태조사(제7조~제8조)
- 바. 협력체계 구축 및 신고체계의 마련(제9조~제10조)
- 사. 협조 및 홍보·교육(제11조~제12조)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수영구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0년 9월 29일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     강 성 태

---

## 부산광역시 수영구 조례 제1008호

## 부산광역시 수영구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동물 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동물보호와 동물복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를 방지하고, 동물의 생명보호 및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실·유기동물(이하 “유기동물“이라 한다)”이란 「동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동물 중 도로·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소유자 등이 없이 배회하거나 종이상자 등에 담겨져 내버려진 동물을 말한다.
2. “등록대상동물”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라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주택·준주택이 아닌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월령(月齡) 2개월 이상인 개를 말한다.
3. “보호조치”란 유기동물에게 적합한 사료와 물을 공급하고, 운동·휴식 및 수면이 보장되도록 노력하여 동물이 본래의 습성을 유지하며 정상적으로 살 수 있도록 보호·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4. “동물보호센터”란 부산광역시 수영구(이하 “구”라 한다)가 유기동물 보호를 위하여 법 제15조에 따라 설치·운영하거나, 부산광역시 수

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하여 유기동물 보호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5. “동물병원”이란 「수의사법」 제17조에 따른 동물병원을 말한다.

6. “길고양이”란 도심지나 주택가에서 자연적으로 번식하여 자생적으로 살아가는 고양이를 말한다.

7. “반려동물”이란 사람이 정서적으로 의지하고자 가까이 두고 기르는 동물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은 동물학대를 방지하고, 동물복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관련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동물보호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구민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동물보호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민간단체에 동물보호운동이나 그 밖에 이와 관련된 활동을 권장하거나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동물복지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국가의 동물복지종합계획 및 부산광역시의 동물복지계획에 따라 동물복지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동물복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동물복지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등록대상동물 소유자 등의 준수사항) ① 등록대상동물 소유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동물의 배설물을 수거할 수 있는 비닐봉지, 장갑 등을 휴대하여 동물이 배설할 경우 배설물을 수거하여야 한다.
2. 외출할 때 사용하여야 하는 목줄은 다른 사람에게 위해나 혐오감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의 길이를 유지하여야 한다.
3. 소유자 등이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조의2에 따른 맹견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제2호에 따른 목줄 외에 입마개를 하여야 한다. 다만, 월령이 3개월 미만인 맹견은 입마개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사육·관리하는 동물이 주택의 울타리 밖으로 주인 없이 나돌아 다니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보조견 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이 장애인과 함께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소유자 등은 등록대상동물에 예방접종을 실시하여 적절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등록대상동물의 등록) ① 시행령 제3조에 해당하는 등록대상을 소유한 자는 그 동물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1. 소유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구청장
  2.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구청장이 등록 업무를 대행하도록 지정한 자
- ②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등록을 신청한 동물에 대하여 시행규칙 제8조제2항 및 별표2에 따라 동물등록번호의 부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등록대행자로부터 제2항에 따라 통보된 등록대상 동물의 등록 내용을 확인하고, 통보된 날부터 5일 이내에 소유자에게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의 동물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동물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7조(동물보호센터의 설치·지정 등) ① 구청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동물보호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법 제14조에 따른 동물의 구조·보호조치 등을 위하여 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동물보호센터를 지정함에 있어, 동물보호센터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지정하기 위하여 자문을 구할 수 있는 동물보호센터 지정위원회를 둔다. 이 경우 동물보호센터 지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③ 구청장은 동물보호센터를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그 내용을 구 홈페이지에 10일 이상 공고하여 신청을 접수하여야 한다.

④ 동물보호센터의 지정기간은 2년 이상으로 하되 유기동물 발생두수를 고려하여 복수로 지정할 수 있으며, 재지정이 가능하다. 동물보호센터의 지정 및 재지정에 대한 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제4항에 따라 동물보호센터를 지정하는 경우 시행규칙 제15조제3항에 따라 동물보호센터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동물보호센터의 장은 반기마다 동물보호

현황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동물보호센터의 감독) ①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동물 보호센터 보호시설의 지정기준 준수여부와 보호·관리중인 유기동물의 건강 및 보호·관리 상태를 시행규칙 제15조제4항에 따라 연 2회 이상 점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점검결과 법 제15조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법 제15조제7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9조(동물보호센터의 역할) 구청장은 동물보호센터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동물의 구조·보호조치 등
2. 법 제17조에 따른 보호 중인 동물의 공고
3. 법 제18조에 따른 동물의 소유자 반환
4. 법 제2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소유권 취득동물에 대한 기증 또는 분양 및 분양공고
5. 법 제22조에 따른 보호조치 중인 동물의 인도적 처리

제10조(동물보호 및 관리) ① 구청장 또는 동물보호센터의 장은 유기동물이 법 제14조에 따라 적정한 보호·관리가 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조한 유기동물이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당한 경우에는 동물보호센터에 보호조치를 하기 전에 「수의사법」 제21조에 따른

공수의(公獸醫)로 하여금 진료하게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 또는 공수의(公獸醫)로 하여금 동물보호센터에 대하여 보호·관리 중인 유기동물의 건강 및 보호·관리 상태를 수시 확인·점검하게 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확인·점검결과 보호·관리상태가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법 제3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1조(동물의 반환 등) ① 구청장은 제9조제1호에 따라 구조한 유기동물의 등록여부를 확인하여 등록된 동물일 경우 해당 동물의 소유자에게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보호조치 중인 유기동물에 대하여 소유자가 반환 요구기간 내에 반환을 요구하는 때에는 관련정보를 확인하고 소유자가 확실한 경우 이를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법 제17조에 따른 공고가 시작된 날로부터 10일이 경과하여도 유기동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나타나지 않거나 동물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동물을 법 제21조 또는 제22조에 따라 처리할 수 있으며, 기증 또는 분양을 하는 경우 중성화수술에 동의하는 자에게 우선으로 분양하며, 중성화수술 등을 권고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등록대상동물인 유기동물을 기증하거나 분양하는 경우 등록 여부를 확인하여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등록을 하여 기증하거나 분양하여야 한다.

⑤ 법 제21조의 “동물을 애호하는 자”의 자격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민간단체에 소속된 사람
2. 법 제40조에 따른 동물보호감시원 또는 법 제41조에 따른 동물보호 명예감시원
3. 기증 또는 분양받은 동물을 번식 등 상업적 목적 또는 실험 목적으로 이용하지 아니할 사람

제12조(피학대동물 보호 및 관리) ① 구청장은 법 제1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동물을 구조하여 소유자로부터 격리하여 보호조치를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구조한 동물을 동물보호센터에 보호조치를 하되,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단체가 보호조치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그 단체에서 보호조치를 하도록 하고, 소유권이 지방자치단체로 귀속된 동물을 법 제21조에 따라 처리하고자 할 경우 보호조치 중인 단체에 우선적으로 분양할 수 있다.

③ 법 제20조에 따라 소유권이 지방자치단체로 귀속된 경우 해당 동물을 법 제21조 또는 제22조에 따라 처리할 수 있으며, 기증 또는 분양을 하는 경우 제11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제13조(소요경비의 징수) ① 구청장은 제11조에 따른 유기동물을 소유자에게 반환하거나 제12조에 따른 피학대동물을 소유자에게 인계하는 경우, 소유자에 대하여 보호조치에 소요된 경비에 상당하는 금액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1조제4항에 따라 동물을 분양하는 경우 분양받은 자에 대하여 해당 동물의 보호 및 관리에 소요된 경비와 중성화 수술에 소요된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소요경비의 산정기준은 「부산광역시 동물 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 별표에 따른다.

제14조(명예감시원 위촉 등) 구청장은 법 제41조에 따라 동물학대 방지와 동물보호를 위한 구조 지도·계몽 등을 위하여 동물보호 명예감시원을 위촉할 수 있다.

제15조(길고양이의 관리 등) ① 구청장은 길고양이의 적정 개체 수 관리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길고양이를 포획하는 경우에는 중성화하여 포획장소에 방사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을 동물보호센터 또는 동물병원에 위탁할 수 있다.

제16조(출입·검사 등) ① 구청장은 필요한 때에는 법 제39조에 따라 동물의 소유자, 사육·관리·보호자, 법 제32조제1항 각 호의 영업자 등(이하 “소유자 등”이라 한다)에게 필요한 보고 또는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시설에 출입하여 운영실태 조사 또는 관계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동물의 보호 및 공중위생상의 위해방지를 위하여 필요 하거나 시설기준 등에 적합하지 않을 때에는 동물의 소유자 등에

대하여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할 수 있고, 그 결과를 구의 홈페이지 또는 구보 등을 통해 공개할 수 있다.

제17조(동물보호업무의 지원) ① 구청장은 유기동물의 구조·보호 및 동물복지와 동물등록 등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예산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동물복지와 관련된 교육·홍보·위원회 등의 활동에 대하여 예산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반려동물의 보호 및 지원) ① 구청장은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 방지대책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동물보호 전담기구를 설치하고 필요한 전문인력을 배치할 수 있으며, 전담기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고 반려동물 실태 조사와 관리규정 위반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반려동물의 생명존중 정신과 가치관 함양을 위해 반려동물 문화공간을 설치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고,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 확산을 위하여 반려동물 관련 문화행사 개최 및 캠페인을 추진할 수 있다.

제19조(표창) 구청장은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공적이 뚜렷한 주민 또는 단체에게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 부 칙

제1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보호 중에 있는 유실·유기동물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동물보호센터는 이 조례에 의하여 지정된 것으로 본다.

**◆ 제안이유**

「동물보호법」 및 「부산광역시 동물 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를 방지하고, 동물의 생명보호 및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함

**◆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 구청장의 책무(제1조~제3조)
- 나. 동물복지계획의 수립(제4조)
- 다. 등록대상동물 소유자 등의 준수사항 및 등록(제5~6조)
- 라. 동물보호센터의 설치·지정 및 감독, 역할(제7~9조)
- 마. 동물보호 및 관리, 반환 등(제10~11조)
- 바. 피학대동물 보호 및 관리, 소요경비의 징수(제12~13조)
- 사. 명예감시원 위촉 및 길고양이의 관리 등(제14~15조)
- 아. 출입·검사 등(제16조)
- 자. 동물보호업무 및 반려동물의 보호 지원(제17~18조)
- 차. 표창(제19조)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0년 9월 29일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      강 성 태

---

부산광역시 수영구 조례 제1009호

##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의원정책개발비”란 의회의 입법 및 정책개발을 위한 조사, 연구 등 용역에 필요한 경비를 말한다.

제5조제2항 중 “관계전문가의 자문을 받을”을 “관계전문가에게 자문할”로 한다.

제6조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연구단체의 연구활동 기간은 연구단체 등록 승인일 부터 해당 연도 말 까지로 한다.

제6조 단서 중 “만료되는”을 “끝나는”으로 한다.

제7조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제5호 및 제6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정책연구용역 과제 심사 및 의원정책개발비 책정에 관한 사항

제8조제1항 본문 중 “10% 범위 내에서”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연구활동에 따른 자료수집비 및 여비
2. 연구활동에 수반되는 간담회, 회의비, 강의료, 전문가 자문경비 등  
필요경비

제8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연구활동비”를  
“연구활동비와 의원정책개발비”로 한다.

- ② 의장은 연구단체가 정책개발을 위한 연구용역을 제안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의원정책개발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1항을 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① 연구단체가 연구활동비를 지원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연구활동비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의원정책개발비의 지급) ① 연구단체가 의원정책개발비를 지원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의2서식의 정책연구용역 과제 제안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의원정책개발비는 연구용역 계약을 통하여 수행하는 경우에만 지원  
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집행한다.

제11조제1항 중 “연구활동비를 지원받은 연구단체”를 “연구단체”로,  
“종료 후 30일 이내에”를 “종료일 10일 전까지”로 한다.

별지 제4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안이유**

의원 연구단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연구 활동 기간을 연장하고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의거한 연구정책 개발비의 지원 내용을 조례에 명시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연구활동 기간(제6조)
- 나. 연구단체의 지원(제8조)
- 다. 연구활동비의 지급(제9조)
- 라. 의원정책개발비의 지급(제9조의2)
- 마.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제출(제11조)
- 바. 그 밖에 용어의 정의 추가(제2조) 및 잘못된 표현 정비(제5조)

부산광역시 수영구 소송사무 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20년 9월 29일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 강 성 태

---

## 부산광역시 수영구 규칙 제603호

## 부산광역시 수영구 소송사무 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

부산광역시 수영구 소송사무 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1조(소송비용 지원) ①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이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수사를 받거나 기소 또는 피소된 경우 변호사 선임비용, 송달료, 인지대 등(이하 “소송비용”이라 한다)을 심급별로 5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소송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공무원은 별지 제10호 서식의 확약서와 별지 제11호서식의 소송비용 지원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직무관련사건과 관련된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의 장(이하 “직무관련사건 부서장”이라 한다)의 결재를 받아 소송업무 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제21조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임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
2. 변호사 선임계약서 및 지급증빙 서류 사본
3. 그 밖에 소송비용 신청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③ 구청장은 소송비용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 수영구 구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금액을 결정하여 소송비용을 지원한다.

제22조의 제목 “비용회수”를 “소송비용 회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소속부서의 장”을 “직무관련사건

부서장”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직무관련사건 부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에게 지원된 소송비용을 회수하여야 한다.

1. 민사소송에서 해당 공무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패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2. 형사사건에서 해당 공무원이 기소유예처분(공소시효 완성으로 인한 불기소 처분을 포함 한다)이나 유죄판결(공소시효 완성으로 인한 면소판결을 포함한다)이 확정된 경우
3. 법원의 판결이나 결정으로 소송비용 등을 보상받은 경우 지원 비용 범위 내에서 보상받은 금액

③ 제1항에 따른 소송비용 회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적극행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경우 등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영구 구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환수할 소송비용 등을 감면할 수 있다.

별지 제1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21조, 제22조 개정 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 [별지 제11호서식]

소송비용 지원 신청서								
신청인	담당자	직급 :			성명 :			
	담당업무							
사 건 번 호	검 찰 청		경 찰 서		고소·고발		민사(기타)	
	접수일	관할법원 및 사건번호	접수일	관할법원 및 사건번호	접수일	관할법원 및 사건번호	접수일	관할법원 및 사건번호
지 원 금 액		금 원						
사 건 개 요								
구비서류		<input type="checkbox"/> 수사개시통보, 출석통지서, 소장 등 입증서류 <input type="checkbox"/> 변호사 위임계약서 사본 및 세금계산서 <input type="checkbox"/> 그 밖의 서류						
<p>「 부산광역시 수영구 소송사무 처리규칙」 제21조에 따라 소송비용 지원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신청인 : ○○○ (인)</p> <p>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 귀하</p>								

**◆ 제안이유**

직무관련사건에 대한 지원 및 회수의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함으로써 직무수행의 안정성을 보장하고 적극적인 행정을 유인하고자함

**◆ 주요내용**

가. 소송비용 지원 규정 개정(제21조)

나. 소송비용 회수규정 개정(제22조)

다. 소송비용 지원신청서 신설(별지 제11호 서식)

부산광역시 수영구 재무회계 규칙 전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20년 9월 29일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     강 성 태

---

## 부산광역시 수영구 규칙 제604호

## 부산광역시 수영구 재무회계 규칙 전부개정규칙

부산광역시 수영구 재무회계 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산광역시 수영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회계법」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① 「지방회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른 회계책임관, 제45조제2항에 따른 통합지출관, 제46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을 별표 1과 같이 지정한다.

② 제1관서는 법 제31조에 따른 지출원을 설치한 보건소, 도서관, 동으로 한다.

③ 회계관계공무원이 휴가·출장 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산광역시 수영구 직무대리 규칙」(이하 “직무대리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가 대리한다. 다만, 법 제23조의 징수관과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으며, 법 제36조의 재무관·지출원 및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25조 및 제46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3조(징수관의 직무위임) ① 징수관의 직무를 분임징수관에게 위임하는 범위는 별표 2와 같이 지정한다.

② 부산광역시 수영구 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는 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제4조(재무관의 직무위임) ① 재무관의 직무를 분임재무관에게 위임하는 범위는 별표 3과 같이 지정한다.

② 구의회는 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제5조(예산집행품의) ① 구청장은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1조제1항에 따른 범위에서 부구청장, 국장, 실·단·과장 등에게 각각 전결로 예산집행품의를 하게 할 수 있으며, 전결 기준은 별표 4와 같이 지정한다.

② 구의회는 의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 전결한다.

제6조(재정사항의 합의) ① 규칙 제22조제1항에 따라 회계업무 담당부서의 합의를 받아야 하는 범위는 별표 5의 구분에 따른다.

② 규칙 제22조제2항에 따라 예산업무 담당부서의 합의를 받아야 하는 범위는 별표 6의 구분에 따른다.

제7조(지출의 절차) ① 규칙 제49조제2항에 따라 부서장은 공사·제조·용역의 도급, 물건의 매입·수리·운반 등에 관하여는 회계업무 담당부서에 그 집행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상경비로 지급하는 소모품의 매입·제조·운반, 소규모 용역 및 임차, 인쇄물의 경우 1건당 추정가격 5백만원 미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인계) ① 규칙 제97조에 따라 출납원의 인계사무를 처리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는 자로 지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처리된 인계사무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처리한 것으로 본다.

제9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 ① 규칙 제13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출납원의 계산서를 작성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는 자로 지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계산서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작성한 것으로 본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부산광역시 수영구보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부산광역시 수영구 재무회계 규칙」”을 “「부산광역시 수영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② 부산광역시 수영구 사무인계인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4호 중 “구, 재무회계규칙”을 “「부산광역시 수영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③ 부산광역시 수영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중 “「부산광역시수영구재무회계규칙」”을 “「부산광역시 수영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별표 1】 회계관계공무원 지정(제2조 관련)

관 직 명	본 청	구의회	제1관서		
			보건소	도서관	동
회 계 책 임 관	총무국장	—	—	—	—
징 수 관	총무국장	사무과장	보건소장	도서관장	동장
분 임 징 수 관	세무1· 2과장, 세외수입업무 소관 부서장	—	보건행정과장	—	—
재 무 관	총무국장	사무과장	보건소장	도서관장	동장
분 임 재 무 관	재무과장, 각 부서의 장 (일상경비 중에서 당해 재무관이 지정한 경비)	—	보건행정과장	—	—
총괄채권관리관	총무국장	—	—	—	—
채 권 관 리 관	세무2과장, 소관 부서의 장	사무과장	보건소장	도서관장	동장
총괄부채관리관	기획감사실장	—	—	—	—
부 채 관 리 관	소관 부서의 장	사무과장	보건소장	도서관장	—
총괄기금관리관	기획감사실장	—	—	—	—
통 합 지 출 관	재무과장	—	—	—	—
지 출 원	지출업무 담당주사	의사업무 담당주사	지출업무 담당주사	지출업무 담당주사	지출업무 담당주사
수 입 금 출 납 원	세외수입 및 징수업무 담당주사	세입업무 담당주사	세입업무 담당주사	세입업무 담당주사	세입업무 담당주사
일상경비출납원	부서 서무업무 담당주사	—	—	—	—
세 입 세 출 외 현 금 출 납 원	지출업무 담당자	지출업무 담당자	지출업무 담당자	지출업무 담당자	지출업무 담당자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반드시 2인 이상이  
업무처리 하여야 한다.

비고 1. 지 출 원 : 재무·회계업무 담당주사까지 지정이 가능함

【별표 2】 징수관의 직무위임(제 3조 관련)

본청	제1관서
가.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의하여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 결정	가.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의하여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 결정
나. 교부금, 부담금, 보조금, 전입금의 징수결정	나. 대체징수결정
다. 과오납금의 반환(지방세 1,000만원 이상의 과오납금 반환은 제외)	다. 과오납금의 반환(지방세 1,000만원 이상의 과오납금 반환은 제외)
라. 기타 건당 1,000만원 이하 징수결정	라. 기타 건당 500만원 이하 징수결정

【별표 3】 재무관의 직무위임(제 4조 관련)

## 1. 본청

(추정금액 기준)

구 분	재무관	분임재무관
공사, 토지매입	1억원 초과	1억원 이하
제조, 용역, 물건매입	5,0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기 타	1,000만원 초과	1,000만원 이하

※ 집행 금액에 관계없이 분임재무관에게 직무위임 가능한 경우

가. 급여 등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전출금, 지방채원리금, 행정재산의 취득에 따른 보상금, 보조금, 위탁금, 대행사업비, 반환금

나. 기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

다. 일상경비의 교부 및 이미 교부금액이 결정된 경비의 지출

라. 조달물자의 구매

## 2. 제1관서

(추정금액 기준)

구 분	재무관	분임재무관
공사	3,000만원 초과	3,000만원 이하
제조, 용역	2,000만원 초과	2,000만원 이하
물건매입	500만원 초과	500만원 이하
기 타	500만원 초과	500만원 이하

※ 집행 금액에 관계없이 분임재무관에게 직무위임 가능한 경우

가. 급여 등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전출금, 지방채원리금, 행정재산의 취득에 따른 보상금, 보조금, 위탁금, 대행사업비, 반환금

나. 기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

다. 일상경비의 교부 및 이미 교부금액이 결정된 경비의 지출

라. 조달물자의 구매

【별표 4】 예산집행품의 전결 기준(제 5조 관련)

품의 구분	건당 추정금액에 따른 전결기준		
	부구청장	국장	실·단·과장
1. 공사·토지매입	2억원 이하 1억원 초과	1억원 이하 2천만원 초과	2천만원 이하
2. 용역 또는 물품의 제조·구매	1억원 이하 5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2천만원 초과	2천만원 이하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것	5천만원 이하 3천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 2천만원 초과	2천만원 이하
4. 봉급·수당 등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	-	-	전액

【별표 5】 회계담당부서 재정합의 대상 경비(제 6조 관련)

대 상 경 비	합의대상금액
1. 공사·용역계약과 관련된 경비	200만원 이상
2. 물품 제조·구매	200만원 이상
3. 시책추진 또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	50만원 이상
4. 민간위탁경비	전 액
5. 민간이전경비, 보조금, 보상금, 보전금, 행사관련경비	전 액
6. 시간외 근무수당, 성과상여금, 포상금	전 액
7. 설계서 또는 규격서 등에 특허 또는 신기술을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	전 액
8. 기타 구청장이 정한 경비	전 액



**【별표 6】 예산담당부서 재정합의 대상 경비(제 6조 관련)**

대상경비	합의대상금액
1. 예산외의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에 관한 사항	전 액
2. 재정에 관계되는 조례, 규칙, 고시, 훈령 및 예규의 제정, 개폐에 관한 사항	전 액
3. 국시비보조의 수입, 세외수입의 감면, 부담금 및 분담금의 결정과 기부금품의 채납에 관한 사항	전 액
4. 보조금의 지원계획통보, 기부금, 대부금 및 장려금의 지출결정에 관한 사항	전 액
5. 구비 보조단체의 예산, 결산, 예산의 집행에 관한 규정 또는 사업계획의 인가, 승인, 사업보고에 관한 사항	전 액
6. 구유재산의 취득, 처분 또는 관리에 관한 사항	전 액
7. 구의 수입의 감소 또는 지출의 증가를 가져올 사항	전 액
8. 구 재정에 관하여 의회의 의결, 동의·승인 또는 의회에 보고하여야 할 사항	전 액
9. 제1호 내지 제8호 외에도 구 재정에 관한 중요사항 또는 이례에 속하는 사항	전 액

**◆ 제안이유**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이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 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 주요내용**

가. 제명 변경

나. 징수관 및 재무관의 직무 위임범위를 정함 (제3조~제4조, 별표 3~4)

다. 예산집행품의 전결범위와 재정사항의 합의 한도 정함  
(제5조~제6조, 별표 5~7)

라. 지출의 절차 및 출납원 인계사무 처리자를 정함(제7조~9조)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고 제2020-885호

## 부산광역시 수영구 금고 지정 신청 재공고

부산광역시 수영구 금고 약정기간이 2020.12.31.자로 만료됨에 따라 차기 구 금고 업무를 취급할 금융기관을 지정하기 위하여 2020. 9. 4. ~ 9. 24.까지 공고하였으나, 주 금고에 1개 금융기관만 신청서를 제출하였으므로 「부산광역시 수영구 금고 지정 및 운영 규칙」제2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재공고합니다.

2020년 9월 29일

부 산 광 역 시 수 영 구 청 장

### 1. 신청금고 : 주 금고

### 2. 지정방법 : 공개경쟁

가. 금고지정을 희망하는 금융기관은 제안신청서를 지정된 기한까지 서면으로 제출  
나. 금고지정은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구청장이 최종 결정

### 3. 약정기간 : 4년(2021. 1. 1. ~ 2024.12.31.)

### 4. 금고별 취급회계

가. 주 금고 : 일반회계, 특별회계 3개, 기금 6개

- 일반회계
- 특별회계(3개) :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지하수관리특별회계, 주차장특별회계
- 기금(6개) : 지역발전사업기금, 평생학습관건립기금, 사회복지기금, 양성평등기금, 식품진흥기금, 옥외광고발전기금

나. 부 금고 : 특별회계 1개, 기금 1개

- 특별회계(1개) : 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
- 기금(1개) : 재난관리기금

※ 주·부 금고 공통 사항

- 특별회계와 기금은 통폐합 되거나 새로이 설치되거나 폐지될 수 있으며,
- 이 경우는 3자(구, 주·부금고) 협의하여 조정하며 조정이 어려울 경우 구에서 결정함.

## 5. 신청자격

가. 은행법에 따른 은행으로 부산광역시 수영구 관내 본점 또는 지점을 둔 금융기관

※ 부산광역시 수영구 금고 지정 신청 공고(제2020-809호)에 따라 이미 주 금고 및 부 금고에 신청한 금융기관은 재공고에 따른 주 금고 및 부 금고에 신청한 것으로 간주함.

## 6. 신청방법

가. 은행법에 의해 인가받은 은행은 주 금고에 신청가능

## 7. 신청안내 및 제안서 접수

가. 관련 서류 열람

- 기 간 : 2020. 9. 29.(화) ~ 10. 8.(목)
- 장 소 : 수영구청 세무2과(1층)

나. 신청제안서 접수

- 일 시 : 2020. 10. 8.(목) 09:00 ~ 18:00
  - 장 소 : 수영구청 세무2과(1층)
  - 부 수 : 12부(원본 1부, 사본 11부)
  - 방 법 : 직접 방문 제출
  - 제출서류 : 금고지정 신청서 및 금고지정 신청 안내서에서 지정하는 서류
- ※ 신청서 접수기한 경과 시 추가서류 또는 보완서류 접수받지 않음

## 8. 평가항목 및 배점 기준 ▶ 표1 참조

## 9. 심의 및 평가

가. 「부산광역시 수영구 금고 지정 및 운영 규칙」에 따라 부산광역시 수영구 금고지정심의위원회에서 금융감독원 등 관련기관이 공시한 자료와 비교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의·평가함

나. 금고지정심의위원회에서는 기 제출된 신청서(제안서)를 근거로 심의하되, 추가 보충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불응할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다. 심의·평가과정에서 금융기관이 제출한 제안서 내용이 허위이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 금고지정심의위원회에서 해당 평가항목의 점수를 0점 처리하거나 불이익 처분 결정을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책임은 모두 해당 금융기관에 있음
- 라. 금고별 평가결과, 주금고 부문에서 1순위로 평가받은 금융기관을 주금고로, 부금고 부문에서 1순위로 평가받은 금융기관을 부금고로 지정함
- 마. 기타 심의 평가 세부사항 및 절차 등은 부산광역시 수영구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름

## 10. 약정체결 및 손해배상

- 가. 구금고 지정대상 금융기관은 지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약정을 체결하여야 함
- 나. 구금고 지정 금융기관으로 선정된 금융기관이 약정을 포기하거나 약정을 체결하지 못하여 부산광역시 수영구에 손해가 발생할 경우 해당 금융기관이 이에 대한 배상책임을 지며, 향후 금고지정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다. 금고지정 또는 약정체결 후,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 등으로 금고로 지정된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 해당 금고지정 및 약정이 해지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모든 책임과 배상 책임은 해당 금융기관에게 있으며, 향후 금고지정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라. 기존·신규 금고간 금고업무 인계인수 시 기존금고에 예치한 정기예금 등에 대하여는 만기도래한 후 인계인수하도록 함

## 11. 비용부담

- 가. 금고지정 신청에 필요한 제반 비용(약정체결 필요사항 및 정보프로그램 개발 등)은 신청 금융기관의 자체 부담으로 함

## 12. 기타사항

- 가. 신청은행별 제안서 12부 확인 후 밀봉 예정이므로 제안서 제출 시, 대표자의 확인을 받은 사용인감(도장), 사용인감 확인서 지참
- ※ 제출자료 검증 및 사전 평가자료 준비를 위한 제안서 1부는 제외

- 나. 제안서 등 제출 자료를 공개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이를 공개하더라도 이의 제기를 할 수 없고, 심의결과 등은 적법한 범위 내에서 공개할 수 있음
- 다. 제출된 일체의 서류(제안서 등)는 반환하지 않으며, 신청서 접수마감 후, 추가 및 보완서류는 접수받지 않으므로 제안서 작성과 제출 시 주의를 요함
- 라. 금고 전산시스템 및 운용프로그램은 2021.1.1.부터 정상 운용 할 수 있어야 하며, 정상가동 기간내 운용할 수 없을 경우 지체상금 등 손해배상 책임이 있음
- 마. 작성내용이 허위로 기재되었을 경우 또는 제반 계획, 제안 등이 실현 불가능 하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금융기관의 제안서가 무효 또는 부적격 처리 될 수 있으므로 정확히 작성하여야 함

## [표1]

##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규칙 제3조제2항 별표1)

평가항목	배 점 (총계 : 100점)
1. 금융기관의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소계 : 27점
가. 금융기관의 신용도 1) 국외평가기관 2) 국내평가기관 ※ 지역조합은 국내평가기관의 신용조사만으로 전체 배점(10점) 평가	(8) 4 4
나. 주요 경영지표 현황 1) 총자본비율(안정성) ※ 지역조합은 순자본비율(안정성, 7점) 2) 자기자본 이익률(수익성) 3) 고정이하여신비율(건전성) 4) 유동성커버리지비율(유동성) ※ 경영지표 평가 세부항목별 등급기준은 해당감독기관에서 각 지역조합 유형별(신협, 농수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로 다르므로 해당 감독기관(금감원, 새마을금고중앙회 등)의 기준을 따름 ※ 금융감독원, 행정안전부 등 감독기관의 경영실태평가 또는 검사기준에서 양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만점처리 가능	(19) 6 5 6 2
2. 구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소계 : 20점
가. 정기예금 예치금리	7
나. 공금예금 적용금리	6
다. 구에 대한 대출금리	4
라. 수시입출금식 예금금리	3
3. 주민의 이용 편의성	소계 : 21점
가. 관내 지점의 수, 관내 무인점포 수, 관내 ATM 설치 대수 ※ 금고지정 여부에 따라 필수로 설치되는 지점은 제외	8
나. 지방세입금 수납처리 능력	6
다. 지방세입금 납부의 편의증진 방안	7
4. 금고업무 관리능력	소계 : 25점
가. 세입세출업무 자금관리 능력	6
나. 금고업무 수행능력	8
다.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 능력 ※ 전산시스템 보안인증 등 전산보안을 강화하여 평가	8
라. 세정정보센터 운영능력 및 계획	3
5.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및 구와의 협력사업	소계 : 7점
가.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실적	5
나. 구와 금융기관의 협력사업 계획 ※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는 “실적”으로만 평가, “구와의 협력사업”은 “계획”으로만 평가	2

##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및 방법 (규칙 제3조제2항 별표2)

### I. 일반원칙

1. 평가 세부항목별 배점부여 및 평가는 금융기관이 제출한 자료 등에 따라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균등하게 배점하여 평가하고, 필요시 평가항목을 등급별·순위별로 나누어 배점을 부여하여 평가할 수 있다.
2. 세부항목별 배점하한은 배점한도의 60퍼센트 이상으로 하여야 하고, 모든 평가 세부항목의 점수편차는 배점한도에서 순위 간 10퍼센트의 편차를 동일하게 적용하여 균등하게 배분하여야 한다. 다만, 평가항목 2번과 5번의 세부항목에 대한 순위 간 점수편차는 5퍼센트로 한다.

### II. 평가 항목별 평가 기준 및 방법

#### 1. 금융기관의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27점)

##### 가. 금융기관의 신용도(8점)

금융기관이 제출한 신용평가서에 대하여 금융기관별로 비교·평가하되, 공인된 국내·외 신용평가기관 등 관계기관이 공시한 자료와 비교·확인(단, 금융기관의 평가등급이 적정수준 이하인 경우에는 예금의 안정성을 위하여 0점 처리)

##### 나. 주요 경영지표 현황(19점)

총자본비율·순자본비율(6점), 자기자본이익률(5점), 고정이하여신비율(6점), 유동성커버리지비율(2점), 금융기관의 공시자료를 기준으로 총자본비율·순자본비율(안정성), 자기자본이익률(수익성), 고정이하여신비율(건전성), 유동성커버리지비율(유동성)을 비교·평가하여 배점하되, 금융감독원이나 정부기관 등 관계기관이 공시한 자료와 비교·확인하여 평가(단, 주요 경영지표 현황이 적정수준 이하인 경우에는 금고 운영의 안정성을 위하여 0점 처리)



## 2. 구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20점)

### 가. 정기예금 예치금리(7점)

금융기관이 제출한 정기예금의 기간별 금리수준에 따라 금고예금의 수익성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 나. 공금예금 적용금리(6점)

보통예금금리를 적용기준으로 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 다. 구에 대한 대출금리(4점)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 제시하는 지방채 및 일시차입금의 규모에 대하여 금융기관이 제시하는 조건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 라. 수시입출금식 예금금리(3점)

금융기관이 제출한 금리수준에 따라 금고예금의 수익성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 3. 주민의 이용 편의성(21점)

### 가. 관내 지점의 수, 관내 무인점포 수, 관내 ATM 설치 대수(8점)

주민의 금융거래와 지방세 납부의 편의를 위하여 구에 소재한 영업점의 분포도를 기준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단, 구에 소재한 점포수가 적정수준 이하인 금융기관이 금고 예금의 유치를 목적으로 경쟁에 참가한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며 0점 처리)

### 나. 지방세입금 수납 처리능력(6점)

최근 수년간 지방세입금 수납실적 및 처리능력을 기준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 다. 지방세입금 납부의 편의증진 방안(7점)

근무시간 외 또는 공휴일에 주민의 금융기관 이용 편의성 제고방안, 정보 기술을 활용한 지방세 등 납부의 편의(전자납부 등) 증진 방안, 파업 등 사고 발생 시 대책 등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 4. 금고업무 관리능력(25점)

##### 가. 세입세출업무 자금관리능력(6점)

지방세 수납에 따른 자금관리 및 각 부서 자금집행 등에 따른 세입·세출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개발능력을 기준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 나. 금고관리업무 수행능력(8점)

부산광역시 및 구·군 등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업무 취급 경험, 금고업무 수행조직(인력운영 계획 포함) 및 운영능력 등을 객관적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 다.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능력(8점)

금고 관련 세입세출의 자금관리 및 지방세 수납개선 등을 위한 전산시스템 운영계획안을 제출받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 라. 세정정보센터 운영능력 및 계획(3점)

세정정보센터 운영능력 등을 객관적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 5. 지역사회 기여 및 구와의 협력사업(7점)

##### 가.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실적(5점)

금융기관이 독자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재해구호 및 지역사회의 복지증진 등을 위하여 활동한 실적 등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 나. 구와 금융기관의 협력사업 계획(2점)

금융기관이 구의 원활한 행정수행을 위하여 지원하기로 제안한 협력사업비 출연금액을 기준으로 금융기관별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